

지역인재 지원 5년 새 39% ↑... 치·한·약·수 줄고 의대 몰려

〈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지역선발 수시 지원자 2만8270명
의대 지원자, 전년비 40.3% 늘어
지역의사제 전형 확대에 변화 전망
내년 고교 내신 5등급 제도 변수

지방권 의약학 계열의 지역 인재 전형 응시자가 5년 새 39% 늘었다. 의대 지원자는 전년보다 40% 넘게 증가했지만, 나머지 계열 지원자는 모두 감소해 의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13일 입시 업계에 따르면, 2027학년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지역 학생 선발 전형 수시 지원자는 2만827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2만5573명보다 2697명(10.5%) 늘어난 수치다. 약대 학부 전환이 완료된 2022학년도 지원자 2만284명과 비교하면 5년 사이 7986명(39.4%) 증가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많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2만284명, 2023학년도 2만2168명, 2024학년도 2만737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의대 정원 확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뉴스시스

대가 반영된 2025학년도 3만4347명으로 늘었다. 이후 2026학년도 2만5573명으로 줄었지만 2027학년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원은 의대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 학생 전형 지원자는 1만5775명으로 전년 1만1247명보다 4528명(40.3%) 증가했다. 반면 치대 지원자는 2566명에서 2348명으로 8.5% 줄었

고, 한의대는 3770명에서 3495명으로 7.3% 감소했다. 약대는 6685명에서 5523명으로 17.4%, 수의대는 1305명에서 1129명으로 13.5% 각각 줄었다.

의대를 제외한 네 계열의 지원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체 지원자 증가분보다 의대 지원자 증가분이 더 커졌다. 전체 지원자 중 의대 비중도 지난해 44.0%에서 올해 55.8%로 11.8%p 상승했다.

지역별 의대 지원자는 호남권이 77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6668명, 대구·경북 6371명, 충청권 5283명, 강원 1914명, 제주 300명 순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제주가 39.5%로 가장 높았고 강원 25.2%, 부산·울산·경남 13.7%, 호남 13.3%, 충청 8.6%, 대구·경북 1.6%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권 일반고 994곳을 기준으로 계산한 학교당 평균 지원자 수는 28.4명으로, 2022학년도 20.4명보다 8명 늘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이 3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 33.6명, 충청 28.1명, 부산·울산·경남 23.6명, 강원 22.5명, 제주 13.6명이었다.

내년부터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확대된다.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지정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권 27개 의대의 지역의사 선발 규모는 2027학년도 466명에서 2028학년도 583명으로 117명 늘어난다. 권역별로는

충청이 30명, 부산·울산·경남이 24명씩 더 선발한다. 호남은 22명, 대구·경북은 18명, 강원은 16명, 제주는 7명 증가한다.

입시업계는 지역의사 선발 확대에 의약 계열의 지원 양상과 합격선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대신 지역 의대에 집중지원한 구도”라며, 지역의사제가 확대되는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자가 더 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고교 내신 5등급제도 변수다. 2028학년도 대입은 2025년부터 내신 5등급제로 성적을 산출한 학생들이 처음 응시하는 입시다. 임 대표이사는 1등급 비율이 10%로 확대되면서 내신 상위권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지방권 의약학계열 진학을 노리는 상위권 학생들의 지역학생 선발전형 지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교장공모 면접서 개인정보·인맥 노출 시 감점

교육부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 서류심사 감점 기준, 면접까지 확대
단계형·합산형 선정 방식 선택 운영

내년부터 교장공모제 대면 심사에서 개인정보나 특정인과의 친분을 드러내면 감점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시도교육감이 심사 점수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7학년도 교장공모제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12일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학교별 특성과 교육 구성원의 요구를 고려해 교장을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우선 감점 기준을 확대한다. 서류 심사에 한정했던 감점 기준을 면접 등 대면 심사까지 적용한다. 기존에는 자기소개서나 학교경영 계획서 등에 이름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거나 특정 단체·인사와의 관계

를 드러냈을 때 감점 대상이었다. 내년부터는 대면 심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면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감점할 수 있게 된다.

선정 방식도 달라진다. 내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기존의 단계형 방식과 합산형 방식 중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 단계형은 학교 심사에서 만점의 85% 이상을 받은 지원자를 교육청에 추천하고, 교육청 심사에서도 만점의 85% 이상을 받아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합산형은 학교 심사와 교육청 심사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해 합산한 뒤, 총점이 만점의 85% 이상이면 선정한다.

교육부는 단계형 방식에서 학교 심사를 통과해 교육청 심사에 추천되는 지원자가 한 명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시도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춰 선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각 교육

청은 공모 공고 때 선택한 방식을 미리 안내해야 한다.

내부형B 공모학교의 지정 비율 산정 방식도 조정한다. 내부형B는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 등이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다. 교육감은 내부형 공모 신청 학교의 50% 이내에서 내부형B 공모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시도교육청에 따라 초등과 중등을 나눠 비율을 계산하거나 전체를 합산하는 등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초등 또는 중등 중 한쪽의 지정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초·중등 전체 신청 학교의 50%를 넘지 않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일자 임용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수정 기자

교육부,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지원

대상 대학, 입학정원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 중심 학과 구조 재편해야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학별 감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한다. 선정된 사립대학 33곳은 5년간 지원받는 대신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교육부는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 결과,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총 33곳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로, 지원 규모는 5년간 약 6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반도체와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항공 등 첨단산업 분야부터 보건·돌봄, 문화·콘텐츠까지 대학의 기존 교육 역량과 지역 산업 수요를 고려해 특성화 분야를 결정했다.

일반대에서는 경운대, 동명대 등 7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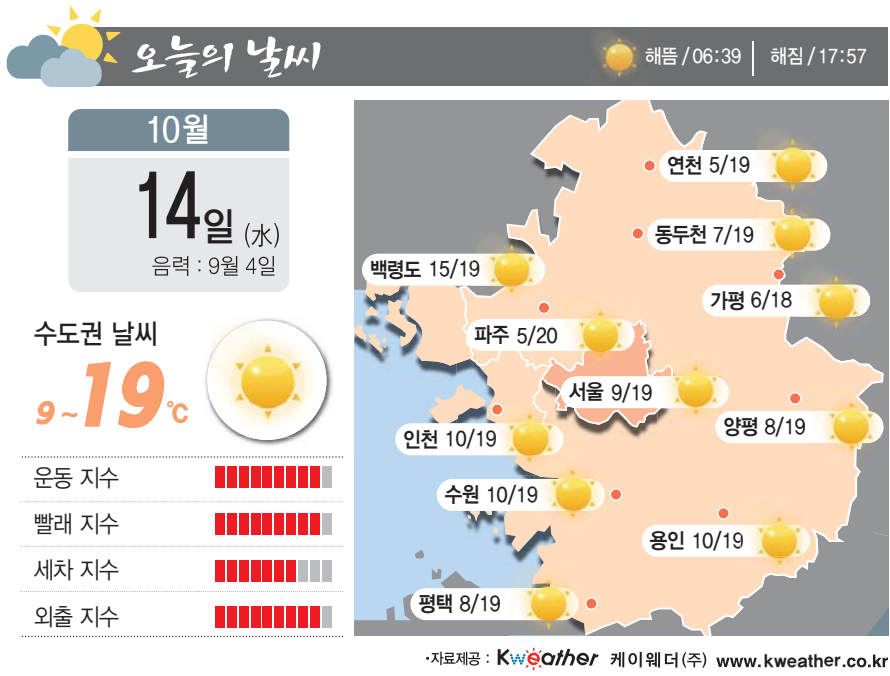
가 첨단·지역전략산업, 고신대 등 6개교가 보건·돌봄·서비스, 경남대 등 3개교가 문화·콘텐츠 분야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됐다.

전문대학에서는 첨단·지역전략산업에서 경기과학기술대 등 9개교, 보건·돌봄·서비스에서 대구과학대 등 5개교, 문화·콘텐츠에서 동서울대 등 3개교가 특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지원 대상 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대학별 계획에 따라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비교위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간 역할을 조정하거나 학과를 통합·재편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축소되는 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대책도 마련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에 평가 결과를 통보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김수정 기자



국민대 전공 변경 유연성 강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바꾸려 해도 몇 학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국민대학교는 1학년 1학기부터 전과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횟수 제한도 없애, 학생들이 대학 생활 초기에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다.

국민대는 학생 선택권을 넓히고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과를 원하는 학생이 기존 전공에서 오랜 기간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수정 기자

서울학생, 내년부터 경남도로 농촌유학 간다

내달부터 참가자 모집 시작

내년부터 서울 학생들이 경상남도에서도 농촌 유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6일 경상남도교육청과 ‘농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양 교육청은 내년 1학기부터 경남 지역에서 농촌 유학을 운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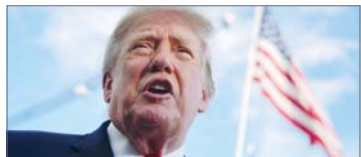
협약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경남에서 유학할 서울 학생을 모집하고 교육·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맡는다.

경남교육청은 농촌 유학 운영 학교를 모집하고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과 거주 시설 확보 등을 지원한다. 양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자 모집은 다음 달 시작한다. 양 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학교 선정과 교육과정·프로그램 구성, 학생 안전 및 생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경남 지역 농촌유학은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한다.

/김수정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러 경유길’ 초당적 반발 직면...“합의 취소해야”
▲젤렌스키 “정유시설 휴전은 러에만 유리...전력 망도 포함해야”

/사진 뉴스시스

▲트럼프 “중간선거 결과, 이란전 판단에 영향 없다”
▲후티 공격 여파에 사우디 리야드 공항 폐쇄 연장...17일까지 중단

▲“사우디, 후티반군 공항 공격에 강경 대응 천명...선택지는 제한적”
▲英·EU, 내달 20일 ‘관계 재설정’ 정상회의의...버남 “EU 재가입 첫걸음”